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2년 3월 30일(수) 총 2매				
담당 부서	협치인권 담당관실	담 당 자	• 시민인권팀장 이창훈 ☎440-4121 • 담당자 권미정 ☎440-4122	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인권행정 구현위해 역량 집중

-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24일 인천서 개최 -
- 인권정책 공유, 인권정책기본법 및 인권보장체계 논의 -

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가 의장도시인 인천시에서 열렸다.

인천광역시는 24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전국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인권 활동과 지자체 인권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협의회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장,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및 인권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, 지방정부별 인권 정책을 공유하고, 국회에 상정된 인권정책기본법과 지역의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유기적인 인권협력체계 강화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.

인천시는 2018년 시민인권팀을 신설하고,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서면서 인권행정업무를 본격화했으며 같은 해 인

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를 구성했다.

인권위원회는 시의 인권정책 심의·자문 기구로, 인권보호관은 인권 침해사건 상담·조사·결정하는 기구로 운영 중이다.

또한 체계적인 인권행정 시행을 위한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인권정책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으며 인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직자 및 출자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.

박재성 시 협치인권담당관은 “인권존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인권 존중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호응 및 협력이 중요하다”면서 “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인권토론회와, 인권옹호자 컨퍼런스 개최 등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인권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관련사진

